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전경



광주·전남행정통합 착착... 시·도의회, “찬성” 동의안 가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공식 찬성했다. 가칭 '전남광주특별시'(광주특별시)는 통합 특별법 제정 전 지역 차원의 최종 절차 격인 시·도의회 관문을 넘어서 지난 1986년 분리된 지 꼬박 40년 만에 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4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동의)의 건'을 찬성 의결했다. 재적의원 23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제외한 2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합 안을 가결했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이날 오전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60명 중 53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행정통합을 찬성 의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균형 발전과 번영의 선순환이 바로 행정통합”이라며 “27

광주, 재적의원 23명 중 22명 출석 전원 찬성
전남, 재적의원 60명 중 53명 출석 52명 찬성
공문화·재정지원 지속성·의원 정수 등 우려도

개 시·군·구 모두가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청사 문제는 통합 후 준비단과 시의회를 통해 창의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지방소멸과 청년인구 유출, 심각한 재정난, 정부 차원의 파격적 지원 등을 이유로 “통합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되 각론을 두고는 여러 우려점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은 “시민투표 없는 밀어 붙이기식 통합이고 광주 정체성

도 무시됐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귀순 의원은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시민체감형 정책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서임석 의원은 학군·인사 등 교육자치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채은지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주청사 소재지는 ‘광주’로 명확히 할 것”을, 최지현 의원은 “도시브랜드 가치 하락을 막고 광역생활권 중심의 ‘특별행정구역’ 지정과 ‘특별의정’ 설립”을 주문했다. 이명노 의원은 “권력독점 견제장치와 부시장 인사청문회”를, 박미정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 준수와

지방분권 후퇴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선 상임위 논의에서는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 방지를 위한 의원 정수 조정과 자치입법권 보장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내놓았다. 신수정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속도보다 방향 ▲이익 수호 ▲특례 등 주요 약속이행을 3대 원칙으로 강조했다. 도의회에서도 진보당 박형대 의원이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투표라는 주민 결정권을 처음부터 배제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을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문성 의원은 전남의 역사·정체성 반영과 주청사 명확화, 국립의대 신설, 거점 국립대 지정, 특별시장 견제 강화 방안 등을 도의회의 공식 의결으로 채택해 달라고 건의했다.<2면에 계속> /기동취재부

통합특별법 국가지원 ‘제각각’... 광주·전남 대응 주목 전남광주 “국세의 세목 이양시 우대방안 마련” 대구경북 “법인세 10%, 부가가치세 비율 명시” 충남대전 “양도소득세 특별시 교부... 국가의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동시에 국회 발의된 가운데 국가지원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에는 지난 2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3일 전남광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순차적으로 등록됐고 법안에는 ‘국가의 책무’가 핵심 규정으로 담겼다. 전남광주특별법 제3조는 통합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임무·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4항에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세의 세목(稅目) 이양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치재정 규정에는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 교통 연계, 지역 균형발전·인구 소멸 해소대책 비용, 사회간접시설 개선·보완 비용, 국립시설 설치, 시·군·구 명칭변경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대구경북 특별법은 제47조에 국세 교부특례를 통해 국세 중 법인세 10%,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제외분)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수치화된 비율을 명확히 담았다. 충남대전 특별법도 제54조에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넣어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 관련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교부해야 한다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3개 지역이 동시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한 지역에 연간 5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약속한 만

큼, 통일된 국가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특별법이 원안 통과 될 경우 한 지역만 편중해 최소 10조 이상을 지원 할 수 밖에 없는 등 통합지자체 간 차별 우려가 있어 3개 지역을 동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국가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선지 통합 지역에 균등한 인센티브가 지원되도록 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 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가동했다. TF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장을 맡아 총괄하고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3개 통합지역 특별법이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명시된 규정을 담을 것인지, 국세 규정 정비를 통한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 발의 전 초안에는 국세 이양을 통한 규정이 명시됐고, 통과될 경우 지원규모는 연간 11조원이었다”며 “대구경북, 충남대전도 최대 12조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연간 5조원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정부TF도 가동되고 있어 특별법의 국가지원 책무는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6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TF에 들어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올해 1월 광주·전남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으며 8년 만에 강추위가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광주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올해 1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1.1도로 평년보다 0.6도 낮았다. 특히 1월 하순에 강한 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되면서 이례적인 추위가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첫날부터 북대서양의 대기 파동

광주·전남 1월 평균 기온 1.1도... 8년 만에 강추위

강화로 상승의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며 영산강에는 평년보다 7일 이른 첫 결빙이 관측됐다. 지속된 강추위는 음의 북극진동(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의 강약 되풀이)과 베링해 부근 블로킹 발달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광주·전남 강수량은 5.6mm로 평년(29.6mm)의 18.9% 수준으로 역대 네 번째로 적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상대습도가 61%로 역대 3번째로 낮았다. 이로 인해 전남 여수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1월

눈이 내린 날은 8일로 평년(7.5일)과 비슷했다. 다만 눈의 양은 18.8cm로 평년(12.1cm)보다 6.7cm 많았다. 전남 목포에서는 총 43.1cm의 눈이 내리며 1월 역대 네 번째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기록됐다. 정현숙 광주기상청장은 “기상청은 기후현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원인을 분석·제공하여 이상기후에 대한 사전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흡 우주항공축제

2026.5.2.① - 5.5.④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흡군 고흡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